격월간 NEWS LETTER

더 불 어

창간호 (3·4월)

발행처-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발행인-최상철 | 기획-홍보팀 | 홈페이지-www.balance.go.kr

Contents

위원장 메시지 ·····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의미

정책 핫이슈 ····· 2
지역발전 제도개선 대책반 가동
균형위, '지역발전위원회' 로 명칭 변경

정책 포커스 ····· 3
MB정부 지역정책 4대 기본방향
균형발전위원회 5대 추진실적

지역 안테나 ····· 4
부실한 교육...떠나는 農心
영동군, 와인 名家 100곳 육성
강원권, 중복규제 피해 심각
"마을에 목욕탕이 생겼어요"
MB정부, 호남권 공들이기
대경권, 제조업 밀집도 전국 '최고'
경북, 3개 댐 조기건설 추진
경남 농산물 명품 브랜드 'IRRORO'

중앙 풍향계 ····· 6
"경제위기 지방수장들 나서야"
지역제한입찰 대상 상향조정
도·농 연계 신문화공간 조성
녹색명품 관광단지 '새만금'
"4대강 사업 확대된다"
"촌스러워 고마워요"
강력한 농어업 개혁추진
혁신도시, 첨단건설기법 도입

글로벌 인사이트 ····· 8
해외탐방기-North Shore City

위원장 메시지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의 의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 오는 2/4 분기부터 개정됩니다. 개정안은 지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되, 광역화·특성화·분권화·자율화의 세기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의 키워드를 '균형'에서 '발전'으로 바꿨습니다. 균형이 산술적 평준화라면, 발전은 균형과 성장을 아우르는 상생의 철학입니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에 살든지 풍요로운 삶의 질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가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함으로써, 전국 방방곡곡이 상생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지역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지역경쟁력·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어떤 나라든 잘 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은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하나의 잣대로만 바라보면, '비교의 비극'이 생깁니다. 잘 사는 지역의 양보와 못사는 지역의 관용이 어울릴 때 상생발전이 가능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지역과 '더불어' 뛰겠습니다. 지역발전 정책을 더 이상 담론이나 슬로건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쟁력은 지역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줄 때 극대화 됩니다. 21세기는 지역이 강해야, 나라도 강해집니다.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이 같은 MB정부 지역발전의 철학과 정책을 구체화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균특법 개정에 맞춰 창간한 위원회 뉴스레터 《더불어》는 앞으로 격월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위원회 정책 활동 ▶광역경제권 추진상황 ▶전국 지역동향 그리고 ▶중앙정부 및 세계흐름까지 지역발전 정책전반에 대한 입체적인 움직임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철

균형발전위원회, 지역 건의과제 · 애로사항 해결 제도화

『지역발전 제도개선 대책반』 본격 운영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 이하 균형위)는 올 1월부터 균형위 · 재정부 ·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역발전 제도 개선 대책반』(반장: 오정규 균형위 기획단장)을 운영, 지역의 건의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또 16개 시 · 도 지역별로 지역담당관(옴부즈만, 과장급)을 지정해, 지역입장에서 해당과제를 검토하는 등 지역과의 소통강화도 본격화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지역별 건의과제를 접수한 대책반은 지난 1월 제1차 회의를 통해 수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체 400여개 건의과제 중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수용한 과제는 54개에 달하며, 기업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경북), 농공단지 입지선정기준완화(충남),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개정(광주) 등 10개가 대표사례다.

〈 지역별 건의과제 중 수용된 대표과제 〉

구분	과제	지역	검토 부처
1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	경북, 전북	재정부
2	신발전촉진지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남	재정부
3	촉진사업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강화	부산, 대구	국토부
4	특화(식품) 농공단지 입지선정 기준완화	충남	국토부
5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확대	경북, 강원	지경부
6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설립기준 완화	서울	교과부
7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	광주	환경부
8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전북	농식품부
9	광역시 농촌지역 고시 조정	광주	농식품부
10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규제개선	강원	문화재청

대책반은 특히 추가적인 별도 논의를 거쳐, 당초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로 분류된 과제를 '수용 또는 적극 검토과제'로 전환하는 등 지역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건의과제 대비 수용률이 약 15.4%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부 수용과제까지 포함하면, 건의 대비 수용률은 약 46.2% 수준이다.

균형위는 대책반을 향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의 건의과제와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며, 기존 과제 외에도 추가 접수된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제2차 대책반회의를 3월 하순 또는 4월 초순께 개최할 예정이다.

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4월 균특법 개정으로 MB정부 지역발전정책 본격화

균형위가 2/4분기부터 '지역발전위원회'로 다시 태어난다. 이에 따라, 광역화-특성화-분권화-자율화 등 相生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MB정부 지역발전정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여야 합의를 마치고 국회 상임위원회(지경위 및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인 만큼, 4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개정안은 광역경제권 · 기초생활권 · 초광역개발권 등 MB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의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법률이다.

여야가 합의한 균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명칭은 현행과 같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유지하되, 기관 명칭은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뀐다. 또 지역발전 계획에서 ▲수도권정비 계획▲기간교통망 계획은 삭제하고, 부칙상 ▲도서를 '2013년까지 특수상황지역에 포함시킨다'는 한시규정도 삭제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 때는 국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일정인 4월 1일에 맞춘 법 시행은 불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균형위는 4월 임시국회 때 부칙상 시행일을 5월 1일 (또는 6월 1일)로 개정한 수정안을 제출하는 한편, 법 시행과 함께 각종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MB정부 지역발전정책 4대 기본방향

1. 광역화 (큰 시장) – 5+2광역경제권 개발

MB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대표상품은 전국을 7개로 묶는 광역경제권이다. 최종 목표는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선도산업과 거점대학을 키워, 수도권에 버금가는 큰 지방경제권을 육성하는 것이다.

2. 특성화 (규제 완화) – 토지 · 환경 · 문화재 등 규제완화

지역별 특성화를 위해 권한확대 · 인센티브 확충 ·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기업이 스스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법인세를 감면한다. 특히 산업 · 관광단지 개발이 쉽게 토지이용 · 환경 · 문화재 규제도 완화한다.

3. 분권화 (권한 이양) – 특별행정기관 이양

빠르고 탄력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토지이용 · 개발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넘긴다. 아울러 중앙정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던 식의약품 단속, 국도 · 하천 · 항만 관리권한의 일부를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중소기업 · 노동 · 환경 · 산림 · 보훈 업무도 지방에 단계적으로 넘긴다.

4. 자율화 (재정 지원) – 포괄보조금제 도입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 재정지원을 확충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 ·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면서, 운용규모도 7.6조원에서 9조원 안팎으로 늘린다. 특히 200여개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20개 내외로 대폭 통폐합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 · 집행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키워드	균형	발전 (성장 + 균형)
특성	지역균형 · 산술적 균형	지역특화 · 실질적 지역발전
지원방법	분산지원	선택과 집중 지원
지원단위	16개 시 · 도	광역경제권
해결대상	수도권 · 지방간 불균형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핵심정책	수도권 규제 · 분산	5+2 광역경제권 개발

MB정부 균형발전위원회 5대 추진실적

1. 지역발전 〈새 패러다임〉 제시 – 광역 · 기초 · 초광역 기본구상 제시

광역경제권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기초생활권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면서, 초광역개발권으로는 '세계와 겨루는'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였다.

2. 〈광역경제권〉 사업 본격화 – 인프라구축 · 산업육성 · 인재양성 투자

권역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50조원(5년간)을 투입하고, 선도산업에 9,000억원(3년간)을 투자하는 한편, 거점대학에 5,000억원(5년간)을 지원, 인프라-산업-인재양성의 입체적인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3. 지역별 〈성장거점〉 육성 추진 – 과기벨트 · 새만금 · 혁신도시 등

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15년까지 3.5조원을 투입해 기초과학 메카로 키우고, 새만금은 저탄소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조성한다. 또 혁신도시는 자족시설 공급확대 · 용지공급 · 가격인하를 통해 자족기능을 높였다.

4. 지방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 지방기업 세제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이전보조금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또 지방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업종을 확대하고, 지방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도입했다.

5. 지방정부의 〈기능 · 권한〉 확대 – 중앙권한 지방이양 · 특별행정기관 정비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특별행정기관을 정비하는 등 지방분권 추진체계 및 방향을 정립했다.

충청권 ◦ 부실한 교육...떠나는 農心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 때문에 시골을 떠나는 초등학생들이 늘면서, 지역 소도시의 인구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3월 충청권 지역 언론에 따르면, 충북지역 4개군(괴산 · 단양 · 보은 · 청양)의 2000년 이후 초등학교 취학생수는 지난 10년 동안 최저 50%, 최고 77%까지 줄어, 같은 기간의 인구감소율 또한 최저 17%, 최고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4개군 2000년 이후 초등학교 취학생수 및 인구추이〉

	초등학교 취학생수				인구추이			
	괴산	단양	보은	청양	괴산	단양	보은	청양
2000년	958	460	468	399	44,461	40,074	43,326	41,093
2003년	776	425	383	405	40,722	35,827	39,186	37,194
2006년	289	311	346	321	37,952	33,623	36,711	34,405
2008년	251	271	289	240	37,066	32,220	35,443	33,456

◦ 영동군– 와인 名家 100곳 육성

영동군은 오는 2012년까지 농가형 와인양조장(Winery, 와이너리) 100곳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20농가를 선발, 4억 원으로 와이너리 창업지원에 나선다. 영동군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20농가에는 와인 1천 *l*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파쇄기 · 착즙기 · 발효숙성통 · 여과기 등 생산시설을 지원한다. 또 특색 있는 농가형 와인전용 포장재와 라벨도 개발해 영동와인의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영동군은 현재 3,889농가에서 2,109ha의 포도를 재배하고, 연간 40,896톤의 와인 생산으로, 1,000억원 소득을 올리고 있다.

강원권 ◦ 중복규제 피해규모 연간 8조원

군사시설보호 등 중복규제로 인한 강원권 연간 피해액이 최대 8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규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분석과 규제 피해액 추정액' 에 따르면, 도내 규제로 인한 피해액은 주민 1인당 553만 5,000원으로 총액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환경 규제, 물 관련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등 3개 분야만 감안한 것으로, 문화재 관련 규제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제군은 자연환경, 물, 군사시설 등 3개 분야 모두에서 18개 시 · 도 중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마을에 목욕탕이 생겼어요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이 올 2월부터 직영하고 있는 목욕탕이 화제다. 임계면이 10억 원을 투입해 직영중인 이 목욕탕은 개장 1달이 지나면서 하루 최대 152명의 주민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목욕탕이 없을 때는 왕복 2시간 걸려 강릉까지 원정목욕을 다니면서, 차량 기름값에 식사와 목욕비를 합치면 2~3만원이 훌쩍 넘어 경제적 부담도 적잖았다. 정선군은 민간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운영을 꺼리자 주민복지 차원에서 인구 2,000~3,000명 규모의 신동읍 · 북면 그리고 임계면 등 3곳에 직영 목욕탕을 개장했다.

호남권 ◦ MB정부– 호남권 공들이기

호남권 광역사업을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 국무총리실 · 지식경제부 ·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신 성장동력 호남권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성장동력 비전과 추진전략,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한총리는 이날 "녹색성장의 단기적 핵심은 4대강 살리기이고, 질적 경제성장의 중심에는 기술혁신을 위한 신성장동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6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 광역발전 전략 토론회'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행안부 · 환경부 · 국토부 · 문화부 · 지경부 장관까지 참여해 호남권 광역발전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대경권

◦제조업 밀집도 전국 최고

〈광역경제권 제조업 집적도〉

대경권	45.1
충청권	42.6
동남권	40.9
수도권	28.3
호남권	26.7
강원권	11.5
제주권	2.8
전국평균	33.0

(2007년 기준, 단위 : %)

대경권이 전국에서 제조업 집적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집중도를 높인 것은 전자 · 철강 · 차부품 · 섬유 등 상위 4대 업종이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내 놓은 '산업집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대경권의 제조업 집적도는 45.1%로 전국 최고였다. 대경권은 외환위기 이후, 충청권과 함께, 제조업 집적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집적도 11.8%, 성장률 9.6%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해, 집적도가 증가할 때 성장률도 증가하며, 제조업 집적이 지난 10년 동안 대경권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 경북– 3개 댐 조기건설 추진

경상북도는 수자원 확보와 가뭄해결을 위해 영덕 달산, 영주 송리원, 영천 보현 등 3곳의 댐건설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경북도는 올 추경예산에 '영덕 달산댐' 건설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0억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영주 송리원댐'은 지난 1월 타당성 재조사를 마무리했고, 오는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영천 보현댐'은 지난 2006년 건설계획을 발표한 뒤 주민 반발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환경단체 반발로 중단된 댐 건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번 추경에 댐 건설 예산 1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줄 것을 신청했다.

동남권 ◦ 경남– 농산물 명품 브랜드 마케팅

경상남도가 지난 3월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IRRORO)'를 선보였다. 라틴어로 '이슬을 적시다'라는 뜻의 IRRORO는 1단계로 전국 생산량 점유율이 높은 사과 · 배 · 단감 · 참다래 등 4개 품목의 최상품에 붙여져, 11월부터 수도권 명품족을 공략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3만~5만 명의 골드회원을 모집해 이들에게만 한정 제공한다. 지정된 239농가에서 출하되는 이들 4개 품목은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엄격히 관리되며, 품목별로 친환경재배 매뉴얼에 따라 생산된다. 경상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고품격 축산물 공동브랜드인 '한우지예'도 출시, 명품 브랜드로 키워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경제위기 극복 지방수장들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한번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전국 16개 광역단체장과 의장,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들이 모인 합동 워크숍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의 수장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관 대변인도 "전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들, 광역단체장 및 의장이 함께 워크숍을 갖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그만큼 국정운영에서 지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장관들과 수석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문제가 일자리 지키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면서 "지역신용보증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이런 사람들을 적극 도와줘야 신빈곤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광역단체장들은 경제극복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주문에 화답했다.

기획재정부 지방건설사 정부입찰 유리해진다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정부건설공사의 입찰금액이 상향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 약법 시행규칙' 을 개정, 국가 공사는 50억원에서 76억원, 공공기관 공사는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각각 높이는 개정안을 지난 3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행정 안전부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자체 공사는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전문 건설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늘린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국가 · 공공기관 · 지자체 건설공사 금액이 9,800억원 가량 늘어나 지역 건설경기와 지방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조정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내역〉

구분		개정 전(A)	개정 후(B)	증감(B - A)
국가	지역제한 대상금액	50억원 미만	76억원 미만	
	공사금액	11,261	12,964	1,703
공공기관	지역제한 대상금액	50억원 미만	150억원 미만	
	공사금액	6,226	11,598	5,372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금액	7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공사금액	35,512	38,151	2,639
지방공기업	지역제한 대상금액	7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공사금액	717	812	95
계		53,716	63,525	9,809

(2007년 기준, 단위 : 억원, 출처 : 대한건설협회)

농림식품부 都-農 문화로 소통한다

전국 6곳에 도시와 농어촌을 이어줄 새로운 문화공간이 조성된다. 농림식품부는 올해 추진하는 신문화공간사업 대상으로 ▶충북 옥천군 청산면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강원 횡성군 청일면 ▶경북 의성군 단촌면 ▶전북 완주군 삼례읍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등 6개 시 · 군을 선정해 지난 3월 발표했다. 신문화공간사업 사례로는 시골 방앗간을 활용한 포토스튜디오, 농촌 폐교를 이용한 천연염색체험, 서당환경을 복원한 서당골데크 등이 있다. 농림식품부는 이처럼 지역고유의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 접목해 도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거점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문화관광부 새만금에 녹색명품 관광단지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가 새만금 관광지구를 '명품'으로 개발한다.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과 김완주 전북지사는 지난 3월 10일 전라북도청에서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정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새만금 관광지구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녹색성장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인 새만금관광지구(990ha)와 문화관광부 소관 새만금 관광유보용지(1,500ha)가 새만금 개발사업 지구 내 부안 쪽에 인접해 있지만, 개발주체가 달라 중복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두 기관 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4대강 살리기 사업비 3,500억원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일자리 4,300여개가 추가로 창출되어 금년에만 총 11,000여개의 일자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 · 가뭄 등 물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도 발전시키는 다목적 사업으로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09.2.11)에서도 여러 가지 녹색뉴딜사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된 바 있으며 총 19만여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전망이다.

농림식품부 촌(村)스러워 고마워요 캠페인 큰 호응

농림수산부가 인터넷에서 벌이고 있는 농어업 · 농어촌 가치확산 캠페인 '촌(村)스러워 고마워요'(www.chonstory.com)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방문자만 22만여명에 이른다. 이 사이트에는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농어업 · 농어촌, 이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CF와 이벤트 형태로 녹아 있다. 희망, 여유, 사랑의 세 가지 스토리로 구성된 '세상에서 가장 촌(村)스러운 이야기' CF는 공감댓글이 5,258건이나 달렸다. 이 사이트와 연계해 다음 아고라에서는 '촌스럽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바꾸자는 청원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2월28일 현재 1,642여명이 동참했다.

국토해양부 혁신도시, 첨단 건설기법 도입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범죄예방설계'가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2년 전후로 전국에 들어설 혁신도시에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설계와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무장애 설계기법' 등 첨단도시 건설기법을 적용한다고 지난 3월 밝혔다. 10개 혁신도시는 지난해까지 실시설계 수립이 모두 끝나고, 토지보상도 95% 가량 진행된 상태로 일부 공구에 대한 공사가 시작됐다.

농림식품부 농업보조금 축소 · 폐지 등 농업개혁 시동

올해 예산으로만 5조 8,000억원(388개 항목)에 달하는 농업보조금이 2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 · 폐지된다. 농림식품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농어업 개혁추진을 강력 지시함에 따라 농업보조금 축소와 금융지원, 농업 경영체의 자생력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농업개혁위원회와 농업개혁 추진TF도 설치한다고 지난 3월 밝혔다. 농림식품부는 공공성이 강한 SOC분야 보조금은 유지하되, 농어업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은 축소 · 폐지할 방침이다. 새로 도입되는 것도 검증을 철저히 하되, 도입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3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업보조금은 올해 농림식품부 예산 14조 5,000억원 가운데 40%인 5조 8,000억원에 달하며, 민간보조와 쌀 소득보전직불금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구분돼 지원된다.